



[산업] 현대자동차 선박용 수소연료전지 내년 상용화 목표 06



Economy

코스피	3252.68 (-32.66)	코스닥	1034.48 (-12.88)
금리 (연이자율)	1.358 (-0.052)	환율 (원/달러)	1145.00 (+6.90) (8일)

m-커버스토리

세계 곳곳서 '규제' 두달 새 1조弗 증발

가상화폐

가상화폐 시장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플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는 가상화폐 시장은 지난 2017~2018년 이후 3년여 만에 강세장을 실현하면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주요 전 세계 국가들이 비트 코인 거래에 대해 규제에 나서면서 향후 시장전망이 안갯속이다. 가상화폐(가상자산)를 향한 각국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빗발치면서 거래 가격도, 거래대금도 투자열풍이 수그러들었다. <관련기사 4면>

세계 가상화폐 시총 1.4조 달러
지난 5월 최고점 대비 42% ↓
대장주 비트코인 46% 떨어져

中, 거래·채굴금지 고강도 규제
美도 감독 위한 실무그룹 구성

8일 가상화폐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전 세계 가상화폐 시가총액은 1조4700억달러(약 1672조원)로 집계됐다. 이는 7760억달러에 불과했던 연초 대비 2배 가까운 성장을 기록했지만 연중 최고점을 기록한 5월 12일(2조5600억 달러)에 비해서는 42%가 넘는 1조 900억달러가 증발한 수치다.

가상화폐 시세 역시 투자 열기가 최고조를 달리던 4~5월 대비 대부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최고점을 기록한 4월 14일보다 46.9%가량 급락해 3만 4000달러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45.3% ▲바이낸스 코인 -51.1% ▲에이다 -

41.7% ▲리플 63.5% ▲도지 68.6% ▲풀가트 64.8% 등 시총 10위권내의 가상화폐(스테이블 코인은 제외)도 고점 대비 큰폭 하락했다.

거래대금 역시 크게 떨어졌다. 지난 3월만 하더라도 국내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의 거래대금은 당시 코스피 일 평균 거래대금인 15조원에 육박했다. 이후 5월 초에는 업비트 한 거래소에서만 40조원을 돌파하는 등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후 시세 급락과 함께 지난달 중순에는 5조원 아래로 하락했으며, 이날까지도 10조원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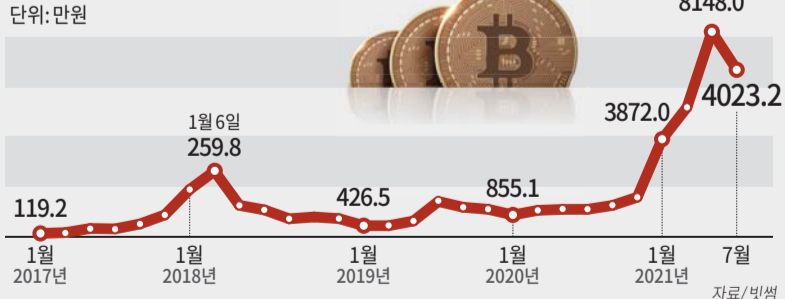
가상화폐 약세의 원인 중 하나로 세계 각국의 잇따른 규제가 지목된다.

중국은 가상화폐 거래 금지와 채굴 금지를 강조하면서 고강도 규제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민간의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재강조한 바 있다.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 가상화폐 관련 계정은 물론 거래소 검색 기능 등을 차단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내 비트코인 채굴이 많이 이뤄지던 쓰촨성, 네이밍 자치구, 칭하이성 등 채굴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미국에서도 규제 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상화폐 시장의 감독을 위해 정부와 의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감독 체계 마련을 포함한 법 개정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12명의 민주당 의원이 참여하는 실무그룹을 구성했다. 미 재무부도 기존 결제 네트워크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가상화폐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글로벌 가상화폐 시가총액 현황



이차전지 총력 지원... 2030년 매출 166조

文대통령 'K-배터리 발전전략 보고'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제2공장 방문
독보적 1등 위해 민관 역량집중 주문

미래 이차전지 시장에서 민·관 합동 노력으로 2030년에는 매출 166조원, 수출액 200억 달러를 달성할 것이라 목표가 제시됐다.

정부는 8일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제2공장 부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K-배터리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K-배터리 발전전략 보고'에 참석해 "K-배터리 산업은 미래를 여는 필수산업"이라며 "우리가 글로벌 주도권을 선점해 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더욱 확실한 글로벌 주도권을 가져가야 할 분야"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2면>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과 기업이 배터리 제조기반 확충,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드는 상황 가운데 "향후 10년은 세계 배터리 산업에서 우리나라 위상을 다시 결정하는 중대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독보적 1등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지금부터 민·관 역량을 집중해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며 "K-배터리가 새로운 미래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도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충북 청주시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제2공장에서 열린 K-배터리 발전전략 보고 'K-배터리, 세계를 차지(charge)하다'에서 행사에 앞서 관련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뉴스1

문 대통령이 참석한 'K-배터리 발전 전략 보고'에서 정부는 ▲전고체·리튬황·리튬공속 등 차세대 배터리 상용화 지원 대규모 R&D(연구개발) 사업 추진 ▲차세대 배터리 파크 구축 ▲차세대 배터리 핵심 소재·부품·장비 요소기술 R&D 강화 ▲리튬이온 배터리 성능·수명·안정성 향상 위한 소재 개발 및 공정 개선 등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전략보고에서 정부는 ▲글로벌배터리 선도기지 ▲희소금속 비축시스템 개선 ▲원자재 공급망 안정성 확보 ▲

배터리 3社 참여 민·관 합동 R&D 혁신펀드 조성 등을 통한 핵심 배터리 소부장 기업 육성 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배터리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 강화 ▲전문인력 양성규모 확대(연 1100명, 현재 연 50명 규모) ▲국가핵심기술 관리제도 개선 등 제도적 기반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새로운 수요시장 창출 차원에서 정부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계획도 발표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절차 없는 인사... 안양대, '부정채용' 논란

교학부총장 '절차 위반' 지적에
임용 4개월 뒤에야 '채용' 의결
3개월 간 총 3500여 만원 지급
학내선 '부당임금 지급' 비판도

안양대학교(총장 박노준)가 대학 규정에 명시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타대학 출신 교수를 교학부총장으로 인사를 단행해 '부정채용'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법인 우일학원은 김성호 교학부총장 취임 4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사회를 열고 김 부총장의 특별채용을 의결했지만, 앞서 3개월간 봉급으로 총 3550만원을 지급해 학내에서는 '부당 임금 지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안양대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 우일학원(이사장 위성호)은 학교법인 정관과 대학 규정에 명시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장 제청과 이사장 임용 승인만으로 지난 2월 19일 김성호 부총장을 교학부총장으로 임명했다.

안양대 교수와 직원 등으로 구성된



안양대 캠퍼스 전경 /뉴스1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은규)가 해당 문제를 지적하고 교육부에 민원을 접수하자, 우일학원은 부총장 인사 4개월이 지난 지난달 이사회와 인사위원회 열고 김 부총장의 채용건을 의결했다. 김 부총장은 직원 2급으로 채용된 상태다.

비대위원장인 이은규 전 총장은 "특정 인물을 미리 뽑고 이후에 채용 과정을 거치는 것은 채용 비리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 재정 상황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김 교학부총

장에게 무리한 급여가 지급된 점도 학내 구성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김성호 부총장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동안 지급받은 봉급은 총 3550여만원에 이른다.

이번 인사를 두고 안양대 일각에서는 안양대가 지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매각'의 연장선이라는 의혹도 나온다. 김성호 부총장은 앞서 중원대에서 10여년간 교원으로 활동하며 교무·기획처장 등 보직을 역임했다.

이에 대해 우일학원 측은 "교육부 지적에 따라 지난달 채용 절차를 밟은 상태"라며 "김 부총장은 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입했을 뿐, 중원대 매매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대학의 소명 자료를 받은 상태로, 조만간 해당 문제를 살펴 별도 처분 가능 여부 등을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hnj@

뉴스비타민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정부, 수도권 거리두기 상향 검토...서울만 4단계도 논의 /사진 뉴스1
▲ 자사고 '행정소송' 10전10승...사학 "교육 당국, 자사고 폐지 즉각 철회하라"

▲ 벨기에, 대사부인 폭행 논란에 "즉시 귀국하라" 긴급 소환
▲ 10가구 중 4가구 전·월세... "집값 안정 위해 임대소득 과세 강화해야"



▲ '청소노동자 사망' 서울대 교수들도 분노... "반성해야" /사진 뉴스1
▲ '임금체불' 싸이월드 전 대표,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